

이재명 “韓, 4대 위기… 위기극복 DNA로 바로 세울 것”

신년 기자회견

민생·전쟁·저출생·민주주의 위기
尹 정부 독단·무능으로 무너져

에너지·과학기술 선도국가로 부상
남북 핫라인 복원 등 정책 도입 제안
총선, 지속가능 韓 만드는 날 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대한민국이 '민생, 전쟁, 저출생, 민주주의'의 위기에 처했다고 진단하고, 위기 극복 DNA가 있는 민주당이 일을 하기 위해 오는 제22대 총선에서 표를 던져 달라고 호소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이 4대 위기에 처했지만, 윤석열 정권의 독단과 무능으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첫째로, 그는 윤석열 정부는 초부자 감세 정책이 나수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했지만 성장은 커녕 막대한 세수결손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문제와 기업과 가계의 이자 부담이 더욱 더 커지고 있다고 언급한 뒤 윤석열 정부가 먹고사는 문제는 등한시켰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1일 서울 국회의사당 사랑재에서 2024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이 대표는 '북한이 몇 달 안에 한국에 치명적 공격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미국 정부 관계자의 전망을 전하면서 "한반도 상황이 '한국전쟁 이래 최대 위기'라는 진단의 체감도가 점점 높아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가 쉬웠던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국민이 전쟁을 걱정하는 이 상황은 분명 정상이 아니다"라며 "윤 대통령이 취임시 밝힌 '담대한 구상'은 결국 온 국민의 머리 위에 놓인 '거대한 시한폭탄'으로 변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함께출산율

0.7명대 시대의 대한민국 저출생 위기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자산과 소득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등 각자도생의 삶으로 밀어넣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부모의 삶을 짓누르는 사회에서, 아이 낳을 엄두가 나겠나"라며 "아이 낳으면 일자리가 위협받는데, 부모의 조건에 따라 아이 미래가 다른데, 아이가 될 생각을 쉽게 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전날(30일) 거북권이 행사된 10·29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언급하며

"국민의 생명을 지켜주지도 못한 국가가, 국민 주권마저 부정하는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이어 "정치와 민주주의의 기본인 대화와 타협, 공존과 존중은 실종됐다. 상생의 정치는 사라지고 상대를 제거하고 죽이려는 적대와 전쟁만 남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대안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에는 위기극복 DNA가 있다. IMF 금융위기와 박근혜 탄핵 공백을 극복하고, 코로나 위기를 모범적으로 이겨낸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라며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 윤석열 정부가 불러온 국정위기를 극복해 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민생경제 위기의 해법으로 에너지와 과학기술을 선도해 미래 전략으로 삼자고 말했다. 그는 "곧 다가올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 경제환경을 피할 수 없다면, 신속하게 정책방향을 바꾸고 속도를 올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변신해야 한다"면서 "첨단 미래산업과 기초과학에 집중 투자해 'AI(인공지능)·혁신산업 중심의 선도국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평화 회복을 위해선 '남북 핫라인'을 복원하자고 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무력도발은 규탄하면서도 남북이 언제든지 바로 연락할 수 있는 핫라인 복원을 통해 대화와 협력의 불씨를 키워내자고 했다.

이 대표는 저출생 위기에 대해선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기본소득' 정책을 활용해 '출생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했다.

그는 "부모의 재산과 소득이 출생아의 것은 아니다. 부모에 따라 지원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면서 "저출생으로 인한 국가소멸과 공동체 파멸을 막기 위해 이제 더 이상 출생 양육의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떠맡기지 말고, 출생아의 기본적 삶은 함께 책임지자"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미 제안한 저출생 공약과 함께 '분할목돈지원 방식'을 포함하는 '출생기본소득'의 윤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오는 4월 총선이 "우리 국민이 이뤄온 민생과 민주주의, 평화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지속가능한 대한민국을 다시 만드는 날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을 위한 정치도, 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요구해야 실현된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비전과 희망, 미래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자신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한동훈, '수원벨트'로 최대 격전지 표심잡기 “민관군경 협력한 국가 총력대비 강화해야”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 가져
철도 지하화·광역급행열차 등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도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1일 경기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원을 방문해 산업 현장을 둘러보고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에는 철도 지하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후 경기 수원에서 반도체 산업계와 간담회를 갖고, 이후엔 교통 인프라 확충 등이 담긴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는 수원이 이번 총선에서 경기지역 최대 격전지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기 수원은 갑부터 무까지 총 5개 지역구가 있는데, 21대 총선에선 5개 지역구 모두 더불어민주당이 이겼다. 국민의힘에게는 '협지'인 셈이다.

그러나 이번 총선에 김현준 전 국제청장(수원갑),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수원병), 이수정 경기대 교수(수원정) 등 국민의힘 영입 인재들이 출사표를 냈다. 당 입장에서도 총력을 다해 지원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 때문에 한 위원장이 직접 '수원 벨트' 지원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먼저 한 위원장은 경기 수원시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에서 한국반도체산업협회 회원 등 산업계 관계자들과 반도체 산업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국민의힘은 최근 고동진 전 삼성전자 모바일 부문 대표이사(구 IM부문)를 영입했고, 이날은 한정민 삼성전자 DS부문 연구원을 영입인재로 발표하는 등 반도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첫번째)과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오른쪽 첫번째)이 31일 오후 경기도 수원 영통구 한국나노기술원 클린룸에서 나노 공정서비스 시찰을 하고 있다. /뉴스IS

체 산업계뿐 아니라 수원 표심을 잡기 위한 행보를 계속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우리의 우선순위는 반도체에 있다. 그 이유는 자랑스런 반도체 산업의 역사가 세계 속에서 역사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질 미래가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며 "늘 얘기하는 건 우리는 소수당이지만 대통령을 보유한 정부여당이다. 우리 정책은 실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가 끝난 후 한 위원장은 수원 장안구 성균관대역으로 이동해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을 발표했다. 이번 공약은 지역 격차와 지역 주민 간 삶의 격차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구도심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이 중심이 됐다. 현재 경부선 철도가 수원 팔달구와 장안구를 동서로 가로고 있어, 수원에 출마하는 모든 여권 후보들이 '교통 인프라'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구도심 함께 성장' 공약에는 ▲철도 지하화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

열차 도입 ▲구도심 융복합 정비 ▲복합 문화·스포츠 공간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우선 국민의힘은 지상의 철도가 전국 주요 도시의 도심 단절을 초래한다고 보고, 지하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지하화 후 남은 철도 상부공간과 주변 부지는 통합개발을 해 미래형 도시공간으로 재창조할 방침이다.

'전국 주요권역 광역급행열차' 공약은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광역급행철도를 수도권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 주요 권역에 도입하여, 광역권을 1시간 생활권으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노후화된 구도심을 '공원-직장-주거-편의시설' 15분 생활권이 가능한 공원-도시결합 미래형 도시로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돌봄 클러스터를 기본으로 갖춘 청년·신혼부부 주택, 병품아(병원을 품은 아파트), 실버스테이 등을 조성할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尹,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 주재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핵 선제사용을 법제화한 비이성적인 집단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기본적으로 군이 방위를 책임지지만 안보 위기가 발생했을 때에는 민관군경이 협력하는 국가 총력 대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최근 북한이 잇따른 순항 미사일 발사와 서해상 포격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민족 개념을 부정한 데 이어 대한민국을 교전 상대국이자 주적으로 못 박았다"며 "이러한 행위 자체가 반민족 반통일이며, 역사에 역행하는 도발이고 위협"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올해 통합방위회의는 북한의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실전적 대응을 점검하는 내용으로 방식을 대폭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57차 중앙통합방위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변경했다"며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에 대해 정부 여러 부처와 지자체들이 각자의 역할과 대응을 통해 실질적인 통합방위체계 구축에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면서 "통합방위태세 구축에 군, 정부 기관, 지자체가 따로일 수 없다"며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尹 각계 원로·제복 영웅 유가족에 설 선물

대통령실, 나눔실천 대상자에도 전달

윤석열 대통령이 갑질년 새해를 맞아 국가와 사회발전을 위해 헌신한 각계 원로, 제복 영웅·유가족 및 사회적 배려계층 등 각계 인사들에게 전통주 명절선물과 대통령의 손글씨 메시지 카드를 전달한다.

대통령실은 특히, 올해는 이웃에 대

한 사랑과 배려의 따뜻한 나눔문화가 확산되길 바라는 차원에서 사회에 헌신해 온 나눔실천 대상자 등에게도 선물을 전달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갑질년 설 선물은 전통주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특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서 차례용 백일주(공주)와 유자청(고흥), 잣(가평), 소고기 육포(횡성) 등으로 구성됐다. /박정익 기자